

탈플라스틱 사회, 시민들은 준비됐다.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응답하라.

지난 4월 28일 제18차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배출전망치(BAU)를 기준으로 한 목표로, 실상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육지와 바다를 넘어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지역은 매일 쏟아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로 한계에 봉착했다.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폐기 전반의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하지만, 기후부는 탈플라스틱이라는 말만 내걸고 폐기물의 증가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환경을 보전해야하는 부처 본연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플라스틱 감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의지를 꺾는다는 점이다. 국내외 17개 단체로 구성된 ‘플라스틱 문제를 뿌리뽑는 연대(이하 플뿌리연대)’는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지난달 28일, 29일 양일에 걸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인식과 감축 실천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8명(83.6%)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공감했으며, 81.3%의 시민은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동시에 시민들은 플라스틱을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68.7%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로만 판매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답했다.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만든 플라스틱 위주의 생산·유통 구조를 시민들이 떠안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나서야 한다고 답했다. 변화를 이끌 주체로 정부를 꼽은 응답이 64.4%, 기업은 58.8%에 달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이 거대한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은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다. 하지만 정부는 말로만 탈플라스틱을 외치고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내놓지 않고있다. 시민들이 언제까지 플라스틱을 줄이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가? 플라스틱을 쓰고 싶지 않아도 써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정부는 지금 당장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탈플라스틱 정책을 도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이에 플뿌리연대는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절대량' 기준으로 전환하고 명확한 이행 경로를 설정하라. 발생 전망치(BAU) 대비 감축이라는 눈속임에서 벗어나, 전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목표와 함께 생산량 감축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정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강력한 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실시하라. 시민들은 포장재와 소비재가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하는 플라스틱으로 꼽았다. 그간 후퇴하고 중단되어온 일회용품 규제를 즉각 복원하고, 사용 및 판매 금지, 생산 금지, 경제적 유인책 등 다양한 수준의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이를 전방위로 확대하라. 다회용기 재사용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 중 하나다. 장례식장, 스포츠경기장, 영화관, 구내식당 등 '달힌 공간' 전반에 대해 다회용기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라.

2026년 6월 22일

플뿌리연대